

미국 2012 新국방전략과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

정철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chong@sejong.org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월 5일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유지: 21세기 국방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新국방전략' 지침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국제질서에서 패권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번 신국방전략이 세계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별 주요 국가들의 외교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공산주의 봉쇄를 위해 냉전전략을 유지하였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새로운 대전략을 모색하였다. 대안으로 고립주의, 선택적 개입을 위한 현실주의, 유엔, NATO와 같은 국제기구에 근거한 집단안보주의 등이 논의 되었으나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미국은 '패권주의'를 추구하여 왔다.

미국의 신국방전략의 핵심은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2개 전장에서의 승리'를 포기하고, 군사중점을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는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 거치면서 미국의 국력은 크게 소진되었고, 국력의 소진은 패권주의의 한계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한 신국방전략의 핵심은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미국이 종래 유지해 온 '2개 전장에서의 승리' 전략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지상군과 핵무기를 감축하는데 있다. 미국은 전략운영 측면에서 군사중점을 이라크, 아프간에서 중국과 이란으로 이전하고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해양통제권 장악 경쟁은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이 지역 안보갈등해소를 위하여 현상타파 정책을 구사할 경우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점차 증진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미, 중 양국이 직접 지상전을 포함한 전면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대리전(proxy war)을 통하여 이 해역에서 해양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남, 동중국해의 영향력확보를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여 '공해전투(AirSea Battle)' 전략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 해역에서 자유통항권과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Neo-Cold War)' 구조가 형성되는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新냉전을 대비하는 미국의 新국방전략

미국 신국방전략의 출현은 미국경제의 악화와 더불어 약 4조달러에 이르는 이라크와 아프간의 전쟁 수행비용, 그리고 과도한 복지 및 의료보험경비의 지출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파산지경에 이르는 국면에서 국방비 감축을 위한 전략 전환에 기인한다. 미국 의회는 정부재정 악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2일 '예산통제법안'을 의결하고 '적자감소 합동 특별위원회'인 '슈퍼커미티(Supercommittee)'를 의회에 구성하여 향후 10년간 1조 2,000억의 정부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협의안 제출 시한인 2011년 11월 21일까지 감축안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2013년 예산집행이 시행되기 전까지 양당이 합의제출하지 못하면 총 9,84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도록 되어 있다. 즉, 미 국방부가 이번 신국방전략지침에서 제시한 4,870억 달러의 국방비 감축에 추가하여 약 5,000억달러의 추가감축이 이루어져 향후 10년간 총규모 약 1조달러(약 1,160조

원) 규모의 국방비가 감축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방은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는 물론 우방국의 안보지원에도 절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신국방전략의 핵심은 미국이 경제력 약화에 따른 국방예산 충족의 한계에 부딪쳐 그동안 유지해 왔던 '두 개 전장에서의 승리' 전략을 현실적으로 축소하여 '한 개 전장에서 승리, 다른 한 개 전장의 억제'로 전환한 것에 있다. 신국방전략은 미국이 지난 10년간 약 18여만 명의 미군을 동원하여 참전한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에서 4,560여명의 전사자와 36,300여명의 부상자 희생을 치른 뒤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두 개의 전쟁을 마무리 하며, 아시아에서 부상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지역의 안보위협 축소에 따라 이 지역 안보를 NATO에 일임하고,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 위협에 미국의 국방력을 집중하고 동맹국과 협동대응하기 위한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미국은 지상군 감축을 통해 국방비를 감축하는 대신 미래전에 부합하는 군사력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네트워크의 증대, 군사전문성과 대비태세 증가를 시도하고 있다. 작전 중심은 알카에다 세력 분쇄와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A2/AD)'에 대응한 '군사력의 투사'를 비롯하여 WMD의 대응과 사이버, 우주전 능력증강과 핵무기 확산억제에 두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 전환점을 구축하는 계기로 신국방 전략을 수립하고 군사전략 운용측면에서 군사력의 규모를 감축하고 구조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우선, 미국은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친 지상군 작전수행을 지양하고, 현 570,000명의 미 육군 병력을 490,000명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의 미군을 약 절반규모로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인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군과 항공력은 증강하는데 군사중점을 두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지만, 신국방전략 발표를 기점으로 중국을 '잠재 적국(potential enemy)'으로 명시하는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전향하였

음을 드러내었다. 실제로 미국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에 높은 비중을 설정하고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결속하고 나섰다. 세계 지역전략 측면에서 유럽지역의 방위공약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중점을 중국을 겨냥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이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지침을 수립한 것이다. 즉, 미 신국방 전략의 작전 중심은 미국의 핵심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으며 또한, 현 분쟁의 상대인 알카에다와 미국의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를 거부하는 중국 등을 비롯한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분쇄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상군의 감축과 유럽지역의 지상군 축소를 통해 국방비를 감축하는 반면, 미래전에 부합하는 합동전력을 조정하여 군사력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네트워크의 증대, 그리고 전투에 기반을 둔 전문성을 증대시켜 대비태세를 증가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미 육군과 해병대의 감축과 동시에 미 군사력의 우위를 지속유지 하기 위하여 미 신국방전략은 새로운 전장에서 요구되는 정보·감시·정찰능력(ISR),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그리고 군사력투사 작전수행능력 증강과 사이버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사력 운용의 대전환을 위하여 지상군 전투를 지양하는 대체 개념으로 해, 공군력의 증강과 함께 기동전력의 현대화, 사이버전 능력 향상, 무인기 전력의 증강 등 새로운 전장국면에 우위를 구사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 新국방전략의 한계와 한반도 안보 영향

오바마 행정부의 신국방전략은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달리 실제 신국방전략을 구체화하고 시행하는 데는 전략 및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국방전략은 미국 국방정책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미국의 군사역량은 '2개 전쟁'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왔다.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이우탁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 유럽과 태평양에서 동시 전쟁을 수행한 이래 NATO와 주한/주일 미군을 기반으로 2개 전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미국이 시기적으로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에는 '2(전면전)+0.5(국지전)' 전략을, 1970년대 중국과 수교이후는 일정기간 유럽위주의 '1.5'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중동과 아시아지역에서 2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윈-윈(win-win)' 전략을 미국의 국방전략 근간으로 삼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이번 신국방전략을 통해 현실적으로 '2개 전쟁'에 제한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1개 전쟁'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미국의 국방전략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2개 전쟁' 포기는 한반도에서의 미 지상군 전투 불확실성과, 지상군 감축에 따른 미 증원군 전개 불투명성을 높이며, 미국의 중국과의 대결구도, 핵우산 보장의 모호성은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미국이 1개 전장에만 집중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적 군사우위 유지와 동맹국 안보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이란 등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미국이 참전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이 지상군의 장기전을 포기하고 지상군 전력을 축소하면서 '2개 전쟁'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이 실용적인 군사전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지원 보장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독단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만약 해당지역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동시에 한반도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을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지상군 전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의 신국방전략은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비롯하여 군사력 운용과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다양한 한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국방전략은 새로이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명확히 제기함으로써 국제정치 역학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군사적 마찰을 야기하고 나아가 미, 중 간의 '신냉전(Neo-Cold War)'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반응은 외연상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공산당 기관지들이 중국의 영향권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진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의도를 표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미국의 지상군 대규모 감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작계 5027을 수행하기 위한 미증원군의 전개가 불투명해졌다. 49만 명으로 축소될 미육군 병력 전부가 한반도에 출동하더라도 전쟁 발발 후 90일 이내 전개토록 계획된 69만명 규모에 못 미치게 된다. 북한의 지상군 증가에 상반되게 미증원군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미미한 수준에 달하게 되며 더욱이 한국 지상군의 규모가 국방개혁(안)으로 감축될 경우 남북한 군사균형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미 해군의 함정 160여척, 공군의 항공기 2,500여대 증원 전개계획은 해, 공군의 특성상 현지인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아 미국의 군사전략 의도에 따라 증원여부와 그 전개 전력의 규모는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한국의 해, 공군력의 부족부분을 미군전력으로 보충하여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한국 국방지도부의 구상은 매우 순진하고 단순한 기대심리인 것이다.

넷째, 미국이 국방비 감축을 위하여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와 '신START'를 위한 협상 기재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노력 대신 용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역력의 약화는 중국의 핵무기 능력 증대와 더불어 핵전략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한국 국방정책의 대응방향

정부와 군은 미국의 신국방전략이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 항공우주 군사력 증대에 따른 한국에 대한 위협증가에 반하여 미국의 군사력 축소는 한국의 안보와 군사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당면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군사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로 전략적 중심(strategic center of gravity)을 이동하는 것에 따른 한국의 대 군사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안보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에서 한국은 분명하게 한미FTA로 더욱 견실해진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확대하여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영향력 행사 의도는 동북공정과 발해역사의 왜곡 시도를 통하여 이미 드러나 있으며 최근 중국 공산당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중국정부의 영향력 행사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방위력을 구축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한국을 신중하게 상대하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아래 놓여 있어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이라면 지금의 수준에 상응한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에도 한반도에 영토적 영향력 확보를 시도하는 중국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에 대응하여 한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는 국가의 안보가 달려있는 치명적 국가이익에 해당된다.

둘째, 미국의 전략지침 변경에 따라 미 지상군의 전투 참여와 증원군 전개가 불투명해졌다.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사의 구조를 해체하는 시점은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어 평화협정이 체결될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한국공군이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항공전력이 구비되어 공군의 전작권 전환으로 육, 해군과 함께 3군 전작권을 행사하는 지휘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 지상군의 참전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지상군의 감군 추진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지상군이 증가되는 군사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상군을 감축하는 것은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미국은 이제 중국을 상대로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군사전략의 기본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은 우선 북한을 상대로 대비태세를 구비하면서 장차 위협으로 등장할 주변국의 해, 공군력에 대응할 해군력과 항공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의 조속한 완공과 아울러 제주 전략항공기지 건설도 착수해야 한다. 이 전략항공기지는 평시 제주도의 과포화된 민항수요도 충족하는 민군공동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를 미국의 MD체제와 연계하여 구축함으로써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에 근거한 연합미사일방어체제를 통하여 한국의 안보를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 능력 증대에 반하여 미국의 핵무기 감축에 따라 약화되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역지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감축, 철수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반입하는 방안을 협상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무기는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유용한 협상도구가 된다.

한국정부와 군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공고한 결속과 아울러 공군의 전작권 확보 시까지 현 연합사체제유지를 통해 안보태세를 보전해야 한다. 향후, 미국과의 '공해전투' 개념을 공유하고 미 전술핵무기의 재반입과 미MD체제와의 연계 등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한미군사관계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 신국방전략은 안보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에 대한 증액 요청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의 감군이 초래할 안보의 위협성과 이에 상응한 한국군의 전력증강 대신 국방력유지 보완차원에서 분담금 증액을 부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분담금 증액이 한국군과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보완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와 적용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중국을 잠재적 국으로 설정하고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군사팽창에 대응하여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부응하여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변국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영향력에 대하여 집요한 의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안보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중국이 의

도하는 전략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은 우회적으로 대만을 영토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만만디(漫漫的)'로 경제적 흡수를 점진적으로 추구해 왔다. 중국은 한국을 대만과 같은 맥락에서 먼저 경제적으로 흡수한 이후 영토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원려한 궁리를 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 유대관계에 기반을 둔 경제협력은 붕괴의 위험 없이 교류가 증진될 수 있으나, 불안한 경제협력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안보관계는 붕괴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의 증대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기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안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북한을 완충국으로 확보하여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아래 두려는 중국의 전략적 공세에 대응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방전략을 발전시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세와 정책」 최근 출판목록

2011년 9월호 (통권 185호)

- 이대우, “증가 추세의 자생테러와 한국”
- 홍현익,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
- 정상화, “미국 채무불이행 위기 이후 국제경제와 경제안보”
- 엄상윤, “6자회담의 재개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 오경섭,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과 전망”

2011년 8월호 (통권 184호)

- 김성철,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중일+미국의 복합외교”
- 강명세, “통상국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
- 김재철, “중국공산당 90년의 빛과 그림자”
- 정성장, “북한 군사국방지도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과제”

2011년 7월호 (통권 183호)

- 전진호, “포스트 후쿠시마(福島)와 한국”
- 문순보,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
- 이종석,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
- 양운철, “경제지수 변화로 추정한 북한경제 현황”

2011년 6월호 (통권 182호)

- 송대성,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정책”

- 홍현익, “김정일 방중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한석희, “제3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 대한 분석”
- 김충남, “오바마의 새로운 중동정책과 한국”
- 마상윤, “빈라덴 사망이후 미국의 대테러정책”
- 배병인, “한-EU FTA 비준과 향후 과제”

2011년 5월호 (통권 181호)

- 김충남, “현대사 재정립의 필요성과 이승만과 4.19세력 간의 화해”
- 문순보, “임기 후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전망”
- 정철호, “2011 미 국가군사전략과 한국의 군사전략 발 전방향”
- 황재호, “중국 국방백서 2010 분석과 평가”
- 전봉근·강정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2년 핵안보 정 상회의”

2011년 4월호 (통권 180호)

- 양운철, “탈북자 면담을 통해 본 북한경제 일상”
- 정상화, “북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전략”
- 엄상윤,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 실태와 북핵 인정 가능성”
- 유현정, “양회(兩會) 개최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발전 전망”

※ <http://www.sejong.org>에서 출력 가능함

세종연구소 학술지 안내

『국가전략』 제17권 4호 | 2011년 겨울

- 목 차 -

논문

클라우제비츠 “무계중심” 개념 분석과 유형별 중심의 한반도에서의 적용	박준혁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의제 설정: '3S'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전성훈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분석과 국방개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박휘락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관계 연구:	
OECD DAC 회원국의 NGO지원정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손혁상 · 한재광 · 박보기
고이즈미 정권기 일본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	
사회적 포섭에서 사회적 배제로의 전환	우준희 · 이대진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관한 소고:	
지정학과 군사과학기술 요인을 중심으로	박병광
동아시아 협력체제의 비전: 다층적 다원주의와 대안적 시나리오	김기석
서평 : 정의론에 대한 접근: '논리적 정의'와 '실무적 정의'	박기덕
부록 : 중국의 화평 발전	국무원 신문판공실

회원제 안내

세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회원제를 실시하여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www.sejong.org)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연간 회원자격이 취득됩니다.
- 연회비 : 일반회원 : 50,000원(1년), 120,000원(3년)
 학생회원 : 30,000원(1년), 70,000원(3년)
 기관회원 : 150,000원(1년), 360,000원(3년)
 개인평생회원 : 1,000,000원
 단체평생회원 : 3,000,000원

【회원특전】

연구소 주최 연구행사 초청 / 연구소발행 출판물 무료 제공 / 기존 출간도서 구입시 20% 할인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 세종연구소 연구지원 · 홍보팀 |
 연락처 : Tel. 031-750-7612 / Fax. 031-754-0100
 e-mail: public@sejong.org

정세와 정책 | 2012년 2월 1일

발행인 | 송대성 **편집인** | 김성철 **편집기획위원** | 강명세, 이태환, 정성장, 홍현익
편집간사 | 원영주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461-370)
전화 | (031)750-7614 **팩스** | (031)754-0100
홈페이지주소 | www.sejong.org

- * 『정세와 정책』은 세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블러틴으로 주요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외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정세와 정책』에 개진된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